

광주 중대형 주택 수요 2012년 이후 줄어든다

주요 수요층 40~50대 35만명 정점 감소

최근 수도권 '집값 광풍'으로 인해 지방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형 주택의 주요 수요계층인 40~54세의 향후 인구변화 모습도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해당 연령대 인구가 향후 16년 이상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광주·전남 등 대부분의 지방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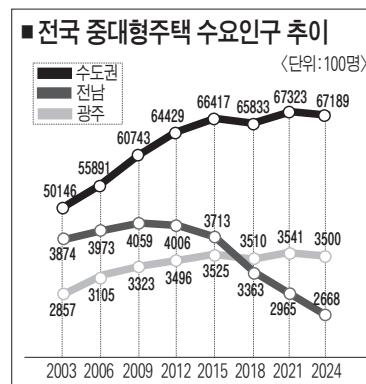
도는 불과 5~6년 뒤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인구변화에 따른 적절한 주택 공급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는 이 연령층 인구가 올해 31만500명에서 2009년 33만2천300명, 2012년 34만9천600명까지 늘어난 뒤 정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은 올해 38만7천400명에서 2009년 40만5천900명까지 늘어난 뒤 2018년께 29만6천500명까지 떨어지

됐다.

이는 광주·전남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2012년을 정점으로 해당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는 이 연령층 인구가 올해 31만500명에서 2009년 33만2천300명, 2012년 34만9천600명까지 늘어난 뒤 정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은 올해 38만7천400명에서 2009년 40만5천900명까지 늘어난 뒤 2018년께 29만6천500명까지 떨어지



게 된다. 불과 3년 뒤부터 중대형 주택의 수요계층이 꾸준히 줄어드는 셈이다.

수도권의 이 연령층은 현재 558만9천100명에서 2009년 607만4천4천300명, 2015년 664만1천700명에 이어 오는 2022년에는 677만4천7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15년간 해당 연령층만 118만5천600명(21%)이 늘어나는 것으로 수도권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향후 20년 가량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시 상하수도 요금 오를 듯

광주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8일 '불합리한 요금 체계 개선과 생산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요금 인상안은 업종 구분이 애매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고 동시에 사용량 당 부과 체계를 5단계

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가정용의 경우 10t까지는 340원(t당)에서 380원으로 11.7%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수도 요금은 평균 t당 332원에서 360원으로 8.5% 오른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지난 13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서민부담 가중을 이유로 보류된 뒤 재상정돼 오는 30일 또다시 심의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김익환 일가 고문 등 2건

과거사위, 진실규명 키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8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과 김익환 일가 고문사건에 대해 위원회 설립 후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에 북한을 고무·동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혁명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고 여수출장소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익환씨 등 가족 3명을 간첩혐의로 불법감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61년 혁명재판소

가 조사장에게 '사회대중당 간부로서 북한의 활동에 고무 동조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지만 조사장은 사회대중당 간부가 아니고 사설을 통해 북한을 고무 동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1971년 9월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수사관들이 여천군 화정성 섬마을에 사는 김익환씨와 조카 김모(여)씨, 김씨 동생의 아내인 강모(여)씨 등 3명을 간첩 관련자로 보고 불법 연행해 고문했다는 진정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석유 의존도 35%로 낮춘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사용량 중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35%까지 낮추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의존도를 9%선으로 대폭 올리며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국가에너

지 계획 '에너지 비전 2030'을 논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4.1%에 불과한 석유·가스 등 에너지의 자주개발률이 35%로 높아져 국내 소요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이 석유·가스 등 국내 기업의 개발분야에 의해 충당되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2.2%에 그치고 있는 풍력과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9%로 크게 늘어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수사팀을 확대 개편, 그동안

온라인 만평

- 김종우



진짜, 못해 먹겠다

석유 의존도 35%로 낮춘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사용량 중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35%까지 낮추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의존도를 9%선으로 대폭 올리며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국가에너

지 계획 '에너지 비전 2030'을 논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4.1%에 불과한 석유·가스 등 에너지의 자주개발률이 35%로 높아져 국내 소요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이 석유·가스 등 국내 기업의 개발분야에 의해 충당되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2.2%에 그치고 있는 풍력과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9%로 크게 늘어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수사팀을 확대 개편, 그동안

광고접수안내

• 직통:(062)227-9600 • FAX:227-9500

전화번호 공고 제2006-663호

전라남도 경찰·아끌어갈 정무부지사·모십니다

민선기자 및 맛있는 전라남도는 '미래를 아는 꿈으로운 전남'을 캐치프레이즈로 경쟁력을 높여 2011년 도민과 모든 꿈꾸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의 성장동력을 미연히 위하여 전남성을 찾는 경제활동을 전남부지사로 보시고자 다음과 같이 꿈과 도전합니다.

1. 도입 직위 :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주무 역할

지역신산업발달을 위한 국내외 부지주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포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

도전부지사로 정무부지으로 도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장 등

3. 지원부서 및 제출기간

3. 지원부서 및 제출기간